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4호 소개

□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맹인안내견 동반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은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이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여 목적지로 가는 길에 다른 병원을 통과하여 지나가는 것을 그 병원에서 맹인안내견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병원에서 위생상 동물을 동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관상 중립적인 금지로 보이지만, 시각장애인인 청구인에게는 특별한 정도의 차별이 되며 이는 기본법 제3조 제3항 제2문의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당의 정치적 경쟁에서 기회균등의 권리> 사건은 독일 연방내무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독일의 대안’ 정당에 대하여 비판한 후, 그 인터뷰를 연방내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건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내무부 장관의 인터뷰 자체는 개인적 차원에서 정당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논쟁에 참여한 것뿐이므로 문제되지 않지만, 인터뷰 내용을 연방내무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은 자신의 공직을 기반으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한 것이므로 국가 중립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청구인(‘독일의 대안’ 정당)의 정치적 경쟁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미국 대선 선거인단의 배신투표를 처벌하는 규정의 합헌성> 사건은 간접선거로 이루어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각 주의 선거인들(electors)이 유권자 투표(popular vote)의 결과와 어긋나게 투표하는, 이른바 ‘배신투표’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워싱턴 주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이 주의회가 선거인들을 임명함에 있

어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고 선거인 자신들에게 투표에 있어 재량을 부여하지 않은 점, 유권자들은 선거인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거인단 투표를 하는 점, 선거인단들은 유권자 투표의 결과대로 투표할 것이라고 기대되어 온 대선의 역사와 관행을 고려하여 배신투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정신병원에서의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의 위헌 여부> 사건은 정신병원에서의 폐쇄병동 격리조치와 결박조치에 관하여 규정한 공중보건법전의 위헌성에 관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에서 격리조치와 결박조치가 가능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격리조치나 결박조치를 다룰 수 있는 구체절차를 규정하지도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위 법률을 폐지할 경우 강제입원한 환자에 대한 모든 격리조치나 결박조치가 불가능해지므로 심판대상 조항의 폐지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성전환자의 주민등록부상 성별정정청구 기각이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은 불가리아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청구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부상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정을 청구하였다가 불가리아 법원에서 기각당하자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불가리아가 성별정정청구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 간의 균형을 이루었는지를 살펴보면서, 불가리아 법원이 청구인의 사회적 및 가족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성별정정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신문사가 개인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기사에 게재하는 것이 정보의 자유 보호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은 한 신문사가

기사를 보도하면서 범죄의 피해자의 사진을 그의 페이스북에서 도용한 것에 관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페이스북 프로필과 같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출처를 통해 얻은 사진이더라도 당사자는 그가 선택한 범위(페이스북 프로필)에서만 볼 수 있도록 동의한 것이므로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이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공익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신문사의 정보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칠레 헌법재판소의 <해외에서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공공부문 의료행위만을 허가하는 조항의 위헌성> 사건은 해외에서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공립병원, 시보건시설 등 공공부문에서만 직업 행사를 가능하도록 한 법률조항에 관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공부문에서의 보건활동을 우선적으로 장려할 국가의 의무가 인정되나, 이를 민간부문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것은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비친고죄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범행에 대한 소급적용의 위헌성> 사건은 범행 당시 친고죄이던 강제외설죄를 친고죄에서 배제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자 개정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처벌로서 금지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최고재판소는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하는 것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평가나 책임의 무게를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법의 부칙은 개정 법 시행 당시 이미 법률상 고소당하지 않게 된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소급처벌을 금지한 헌법 제39조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잠비아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20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에 관한 소식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재판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프랑스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인터넷상 혐오 발언 처벌법, 표현과 소통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사이의 갈등 - 프랑스 헌법재판소 2020년 6월 18일 결정을 중심으로->는 인터넷상 혐오 표현과 테러리즘 선동, 소아성애적 음란물에 대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콘텐츠 접근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등의 법률안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다룬 것입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률안이 인터넷 콘텐츠의 불법성을 단순히 행정기관이 판단하게 하고 실질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점, 위반시 처해지는 형사처벌이 과도한 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고된 모든 콘텐츠를 기계적으로 삭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표현과 소통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일본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오사카시(大阪市)의 혐오표현 대처에 관한 조례와 조례무효소송>는 오사카시에서 제정한 ‘혐오표현의 대처에 관한 조례’에 관하여 다룬 것입니다. 오사카시의 조례는 중립적인 혐오표현 심사회를 설치하고, 혐오표현에 해당하는 경우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은 조례폐지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사카 지방법원은 위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을 지니지만 그 규제의 목적이 정당하고 표현행위자나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고 다만 혐오표현 사실만을 시

측에서 공표하는 것에 그치므로 합리적이고 필요한 한도의 제한이며 표현행위자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